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2017년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 개최 올해 신규과제 8건 ... 이월과제 등 총 12건 분쟁과제 해결 추진키로



한국수산회는 4월 25일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를 개최해 금년도 분쟁과제를 선정하고 해소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수산회는 지난 4월 25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분쟁조정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자율조정협의회(총괄협의회)(위원장 김영규)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 신규로 채택된 8건의 분쟁과제를 확정해 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관련기사 2면>

또 지난해 이월과제 5건 중 4건은 계속 조정을 진행하고, 1건을 자체 종결기로 함으로써 올해 총 12건의 분쟁과제 조정에 나섰다.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에서는 지난해의 경우 △전남완도 대야1리어촌계와 대야2리어촌계간 지선경계선 분쟁 △경

남고성 정치망어업협회와 연안들망어업 협회간 조업분쟁 △완도약산 화가넙고·천동어촌계간 매생이 양식지 조업분쟁 등 3건의 분쟁과제에 대해 조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04년에 구성된 자율조정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총 44건의 어업분쟁을 조정 완료함으로써 어촌사회의 갈등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올해 신규과제로 채택된 8건의 분쟁조정 과제는 △완도 약산 화가여동 어촌계간 매생이 양식지 조업분쟁 △진도 전두나리 간척지구 외해수역 한정면허 김양식지의 어촌계(전두1리 및 전두2리공동체)-어촌마을(나리어촌계)간 김

양식 행사에 따른 조업분쟁 △거제 새우 조망어업과 통영 연안복합어업간 조업구역 분쟁 △거제 대구호망어업과 연안자망어업간 조업구역 분쟁 △경북 연안선망어업과 경남 근해소형선망어업간 어업분쟁 △인천 강화 젓새우잡이(일명 콩지배) 조업 △충북 제천 내수면어업 조업구역 중복에 따른 분쟁 △제주 서귀포시 월평어촌계 인가에 따른 강정어촌계와의 어장분할 분쟁 등이다.

이와 함께 이날 조정위원회에서는 △김이운 △양금철 △김주연 △박경대 등 4명의 위촉직 조정위원을 새로 선임했다.

한국수산회는 어촌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업분쟁에 대해 어업인들이 해결을 요청할 시 과제를 검토한 후 조정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소방안 마련에 주력해 오고 있다.

아산 내수면공동체 아산호 일대 환경정화 활동



충남 아산내수면공동체는 최근 전국 최대 공공수면인 아산호에서 어장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화활동은 아산호 내수면공동체 주관으로 아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해 아산호 2228ha 주변 쓰레기 약 15톤을 수거했다.

아산호 인접주민 20가구로 구성된 아산호 내수면공동체는 2015년 자율관리공동체로 참여해 수산자원조성과 어장환경 정화활동 등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 3회 추진

5월 15일부터 일본에서 1차 연수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지도자 및 구성원들에게 외국의 수산자원 관리 선진사례를 견학케 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참여의식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체 해외 우수사례 답사 계획이 마련됐다. 올해는 총 3차례 해외 우수사례 답사를 실시하는데, 연수 대상국은 일본, 노르웨이, 대만이다. 1차 연수는 오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간 일본 후쿠오카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의 선진 양식시설 등을 견학한다. 2차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5박7일간 북유럽의 선진수산국가인 노르웨이에서, 3차는 오는 10월경 대만에서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 참여 어업인은 1차의 경우 신규공동체 어업인 12명,



지난해 6월 일본 북해도지역에서 자율관리공동체 어업인들이 해외연수를 갖고 있는 모습.

2차와 3차는 우수공동체 어업인 각 1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수대상 어업인은 우수공동체의 경우 평가점수 600점 이상인 공동체 중 매 차수마다 공동체 유형별로 적절히 안배하여 선정하며, 신규공동체는 2016년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공동체 중 지역별, 유형별을 감안해 선정한다.

화성 백미리공동체 자체예산으로 전체 회원 대상 일본 견학



화성 백미리공동체 회원들의 일본 견학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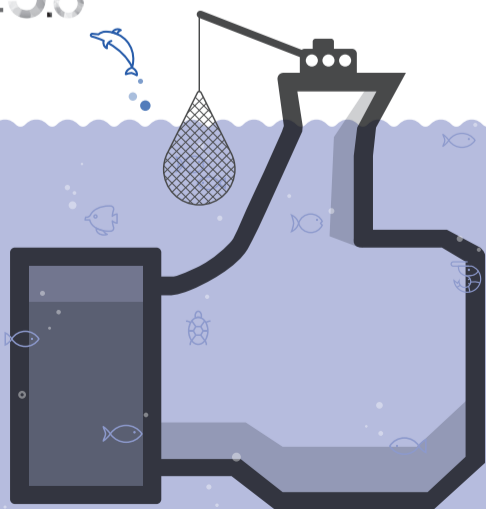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호연)는 회원 간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해 최근 자체예산 1억원

을 들여 80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일본 견학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백미리공동체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을 제외한 전체 회원 80명을 2개팀으로 나눠 2박3일간씩 일본 큐슈지역내 후쿠오카, 기타큐슈, 벳부 등을 둘러보는 선진지 견학을 추진해 여타 공동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내가 지켜줄게, 우리 바다야”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 3.0



넓은 바다라도 막 쓰면 안 돼요.
어업인 스스로 바다를 청소하고 자원을 아끼는 것이 자율관리어업의 첫걸음입니다.

넓은 바다라서 혼자선 안 돼요.
해양수산부가 확산운동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넓은 바다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우리 모두가 바다를 아끼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꿈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 어장환경개선, 불법어업 방지를 실천하는데 자율관리어업이 있습니다.

www.jayul.go.kr

자율관리어업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업회 및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함께합니다.

경기도 관내 공동체 위원장 등 70여명 참석 '어촌지도자협의회' 개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장 김동수)는 4월 5일 공동체 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지도자협의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장 김동수)는 도내 어촌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5일 경기남부수협에서 '어촌지도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어촌지도자협의회 위원 47명과 도내 수산 유관기관 관계자 26명 등 총 73명이 참석해 도내 수산정책과 어업활동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2017년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새로운 수산소식을 소개하고, 국

도립 수산연구사업 추진 현황, 중국의 해삼양식동향 등을 교육했다. 한편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촌지도자 양성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내 어촌계장,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신지식어업인, 수산단체대표, 여성단체 지도자 등을 어촌지도자 위원으로 위촉하고 매년 3회 어촌지도자협의회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 이어 오는 7월과 9월에 어촌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8곳 마을어장에 패조류 투석공사 추진

서귀포시, 사업비 7억5000만원 투자해 올해 상반기 마무리

서귀포시는 관내 3개 지구 어촌계 18곳의 마을어장을 대상으로 패조류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패조류 투석공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패조류 투석공사사업은 사업비 7억5000만원(지역발전특별회계 6억원, 지방비 1억5000만원)을 투자해 동부와 서부, 중부 지구 3곳에서 각각 3240㎡ 규모(총 9720㎡)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모래 지역이거나 모래와 암반이 일부 섞여 있는 지역으로 중부 지구는 서귀동과 법합동, 보목동, 하례리, 신례리, 남원리 등 6곳이다. 동부 지구는

태흥3리와 하천리, 신천리, 삼달리, 신산리, 오소리 등 6곳이며 서부 지구는 가파리와 영락리, 무릉리, 하모리, 사계리, 대평리 등 6곳이다. 패조류 투석 사업은 마을 어장 내 모래가 있는 지역에서 감태 등의 서식환경을 제거, 소라나 전복 등 수산자원의 기반마련과 바다의 사막화를 막기 위한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태흥3리의 경우 고령 해녀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수심 5m 이내의 일명 '할망바당'을 조성해 고령 해녀의 안전 조업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전국 첫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시범사업' 도입 충남도, 5개 우수어촌계 선정해 사업비 지원



충남 태안의 한 어촌계 회원들이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다. 충남도는 어촌사회 고령화에 대비,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젊은 귀어귀촌자 유입 유도를 위한 충남도의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시범사업'이 고령화한 어촌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어촌공동체에 활력과 귀어귀촌자의 어촌계 가입을 돕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도내 167개 어촌계 가운데 22개가 참여했다. 이들은 신규회원 가입이 쉽도록 기존의 까다로운 정관과 규정을 고쳤다. 또 지역주민의 가입비를 대폭 낮추고 귀어귀촌자에게는 가입비를 면제해 젊은이의 가입을 유도했다. 보령시 군현어촌계의 경우 지역주민의 어촌계 가입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고, 귀어귀촌자에게는 가입비를 전액 면제했다. 가입문턱이 낮아지면서 계원수가 330명에서 421명으로

늘었다. '젊은 피' 수혈은 어촌계원 평균나이도 10세 가까이 낮췄다. 서천군 마량어촌계도 어촌계원 자격요건을 대폭 수정하고 가입금 등 신규회원 가입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모두 정리해 젊은 귀어귀촌인 5명을 새로 맞이했다. 어촌계들은 신규 계원 증가에 맞춰 마을어업 공동작업장과 바지락 채취 체험장 등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 운영에 나섰다. 특히 도시관광객 유인을 위한 젊은 계원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체험관광사업이 빛을 발하면서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날 어촌계 5곳을 우수어촌계로 선정하고 시상금으로 6,000만~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을 받은 어촌계 5곳은 최근 3년간 신규 계원이 209명 증가했다.

부산 동삼어촌계 만선 풍어제 개최



매년 음력 3월 3일을 맞아 어민들의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제54회 동삼어촌계 만선풍어제 및 한마당 축제'가 지난 3월 30일 영도구 동삼동 하리항 매립지 입구에서 어촌계원 및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7년 자율관리어업 신규 분쟁조정 과제

한국수산회는 지난 4월 25일 자율조정협의회를 갖고 금년도 신규 과제 8건을 포함, 총 12건의 분쟁과제를 채택,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다음은 올해 신규 분쟁조정 과제이다.

- **완도 약산 화가어동 어촌계간 매생이양식지 조업분쟁**
오랫동안 유류지 갯벌로 방치되었던 수역이 새로운 소득품종인 지주식 매생이 양식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두 어촌계가 같은 지선의 매생이 양식지를 두고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조업 분쟁.
- **진도 전두나리 간척지구 외해수역 한정 면허 김양식지의 조업분쟁**

진도 전두나리 간척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인근 수역 어촌계 어업권이 보상에 의해 모두 소멸했으나 이 수역에 새로운 형태의 갯벌이 조성돼 김양식 여건이 만들어짐에 따라 관련 어업인들이 양식지 면허를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건의해 진도군수협을 어업권으로 하는 한정면허 김양식지가 조성됨.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두1리 및 전두2리 공동체와 나리공동체간 발생한 분쟁.

- **거제 새우조망어업과 통영 연안복합어업간 조업구역 분쟁**
통영, 거제 새우조망 조업구역내 통영 연안복합어업(문어단지)의 조업구역 점유와 새우조망어업측의 문어단지 어구

와의 중복 조업으로 인한 어구(문어단지) 손실 등으로 발생한 분쟁.

- **거제 대구호망어업과 연안지방어업간 조업구역 분쟁**
대구호망어업의 어획부진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당초 허가구역을 이탈하여 허가건수보다 시설을 늘림에 따라 연안지방어업의 조업구역이 잠식돼 발생한 조업구역 갈등.
- **경북 연안선망어업과 경남 근해소형선망어업간 어업분쟁**
최근 포항지선에 청어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경북 연안선망어선과 경남 근해 소형선망어선간 조업경쟁이 과열돼 발생한 분쟁.
- **인천 강화 젓새우잡이(일명 공자배) 조업 인천 소래공동체는 최근 연안안강망 한**

시어업 허가로 젓새우를 포획하고 있으나, 조업시기 한정으로 경영이 어려워 3월부터 어획하는 독새우 등을 어획할 수 있도록 타업종(젓새우)의 의견 조정을 요구함.

- **충북 제천 내수면어업 조업구역 중복에 따른 분쟁**
낚시업과 각망, 통발어업 등 동시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전(前) 소유자가 2개 허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매수자간 동일 지역에서 조업구역 중복에 따른 분쟁.
- **제주 서귀포시 월평어촌계 인가에 따른 강정어촌계와의 어장분할 분쟁**
월평동지선 마을어장은 현재 강정어촌계로 면허처분이 돼 있으나, 이 마을 어장에는 오래전부터 해녀들이 조업해 오고 있어 이들과 강정어촌계간 발생한 어장분할 분쟁.

특별기고

자율관리어업과 분쟁조정

지난 2001년 태동한 자율관리어업은 자원조성 및 관리에 대한 어업인의 의식을 변모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어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간 또는 지역 간 갈등은 아직까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어업분쟁은 공동체 간 다툼으로 번져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하면서, 자율관리어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 경계를 둘러싼 갈등과 해양레저활동의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분쟁발생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할 조정기구로는 한국수산회에 설치된 '자율조정협의회'와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의 양대 기구가 있다. 현재까지는 이들 양 기구의 활동에 힘입어 일선 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들이 사법당국까지 가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어업인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한 문

제까지 외부기관에 진정과 고소, 고발, 송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시간적, 금전적 손실 이외에도 상대방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여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살면서 송사에 휘말리지 마라", "법 좋아하면 법으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그동안 양기구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어업분쟁조정 경험을 토대로 개선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분쟁조정 방안 및 개선책

1. 모든 어업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하지만 해결이 난망할 때는 1차적으로 각 지역을 담당하는 한국수산회 컨설턴트를 통해 중



임여호
한국수산회 전문위원 / 이학박사

재를 요청하고, 불가할 경우에는 2차적으로 '한국수산회 자율조정협의회'와 해수부 '동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수 집단 간의 협상시에는 강경책을 주장하는 소수어업인

으로 인해 다수의 온건합리적인 어업인들이 매도를 당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먼저 이해 당사자 집단을 교차 방문하여 다수어업인 의견을 청취한 후 복수안을 도출한다. 이어서 각 업종(공동체)에서 위임받은 소수의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안을 놓고 협의하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조정위원회는 공통분모의 합집합을 마련해 보고 차선 대안도 제시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3. 합의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확

히 적시해야 한다. 특히 어선어법의 경우 상호 조업구역과 조업기간 중 어구표시 방법, 상호 조업어선 명단 교환과 협약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협약서에 명기하고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서명토록 한다.

4. 양 조정기구의 조정방식에서도, 민간조정기구인 자율조정협의회는 '화해 및 알선', 정부기구인 어업조정위원회는 '조정과 중재'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조정 결과물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법률(가칭 '어업분쟁조정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분쟁 조정 대상도 '집단간 분쟁'에서 '개인간 분쟁'으로 까지 조정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이와 더불어 어업분쟁을 슬기롭게 타결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자율관리어업 평가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수산관련 사업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신간안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성공사례집 발간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동체를 지역별·유형별로 선정하여 심층조사분석한 사례집을 발간, 각 지자체를 비롯 유관 기관단체에 배포하여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사례집에 수록된 공동체는 연구기관인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의 일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전국 18개 공동체로서, 이들 공동체들이 성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통해 자원관리의 중요성, 구성원의 협동심과 같은 성공요소를 심층 분석했다.

18개 공동체는 △김녕 △미더덕 영어조합법인 △무창포 △유호 △진도보전참전복 △동해연안연승 △예당내수면 △성산 △수산 △쌍근 △학동 △여호 △강원붉은대게통발 선주협회 △목포연안통발 △신흥 △석병2리 △백미리 △채석포공동체이다.

해수부, '수산업 실태조사' 발표

수산업 종사자 104만명, 수산분야 매출액 65.9조원

수산업 종사자 월 172만원 수입 ... 10명 중 6명 이상이 50~60대

4월17일 해양수산부가 4월 17일 발표한 '2015년 기준 수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수산업 83만여명, 연관산업 32만여명 등 총 104만4000명으로 산출됐다.

이번 조사는 수산업(생산·가공·유통·서비스업)과 연관산업(어선건조·기자재·생산·어선 등 유통·연관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된 8개 수산 분야 6117개 사업체와 2135명의 어업인을 표본으로 한 것이다.

어업, 수산물 가공업 등에만 한정돼 실시되던 실태 조사가 수산물 기자재 산업,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으로까지 확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월 175만원 정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어선 건조업이 24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자재업(231만원), 어선 등 유통업(201만원)이 뒤를 이었다.

수산물 가공업의 경우 159만원으로 8개 업종 가운데 가장 임금이 적었다.

사업 전체적으로도 수산업 자산 총액은 215조 8천억 원으로 규모가 큰 편이었으나, 이 중 자산 대비 60%가

넘는 131조9000억원이 부채다.

종사자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50대가 34.2%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28.3%), 40대(22%)순이었다.

전체 종사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이 50~60대인 셈이다.

특히 사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어업인(13만여명)의 평균 수산업 종사 기간은 약 25.5년이고, 30년 이상된 어업인이 절반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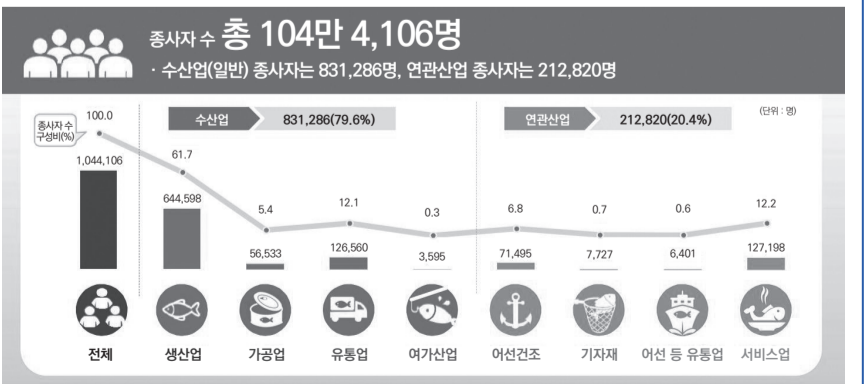
또 개인 어업인 3명 중 2명꼴로 어업 외에 농업, 음식업 등 다른 업종을 겸업하고 있다.

이는 업계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어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힘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용형태 역시 임시직(46.2%)이 가장 많았고, 상용직(30.5%), 자영업(14%)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수산업 사업체의 총매출액은 국가 전체 매출의 1.2%에 해당하는 65조9000억원이었고, 수산물 유통업(28조4000억원)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종사자가 가장 많은 수산물 생산업의 경우 매출액이 16.7%에 그쳤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작해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www.mof.go.kr/statPortal)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게재하는 한편 앞으로 매년 수산업 실태조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수산회 제6회 수산인의 날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



한국수산회(회장 김영규)가 제6회 수산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고 있는 모습.

한국수산회는 지난 3월 3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6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수산업 관계자 3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한국수산회는 한·중·일 3국 민간어업협상 대표단체로서 수산인의 권

익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한국수산회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통해 참여공동체를 크게 확대하는 한편 국산 수산물의 수요창출을 위한 대국민 수산물 홍보 및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운영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해 영예의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실시

100억원 규모 신규사업 6월 중 선정 예정

해양수산부는 4월12일부터 5월15일까지 내년에 추진될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사전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양식기술을 현장에 도입하고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에 대한 상업적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인 이 사업은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시행하는 '양식기술 컨설팅구축 사업'과 민간이 주축이 되는 '첨단양식시스템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모집한다.

종자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질병 피해를 자주 입는 품종에 대한 연구, 종

자생산 시설 지원 분야와 첨단 양식기술을 활용한 양식시설 지원 분야의 신규 사업을 중점 선정한다.

올해에는 작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국비 97억 원 규모의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사업 사전 공모를 통해 국비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신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 육상양식장의 폐사율 저감 성과가 입증된 오존, 자외선(UV), 전기분해 등 양식장 용수 살균시스템을 도입하는 용수정화사업과, 해수형 순환여과식 양식시설·바이오플라크 양식시설 지원사업은 지정 공모 과제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소청도 '해삼섬'으로 거듭난다 수산자원관리공단, 대규모 해삼양식단지 조성



해삼섬 조성을 위해 투석하고 있는 모습.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정영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으로부터 해삼양식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와 소청도

일원에 대규모 해삼섬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해삼섬 기반 조성(18억원)과 해삼 종자방류(6억원) 사업이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해삼의 서식과 은신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한 자연석 시사업(11억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생산되는 해삼은 품질이 매우 우수해 평도의 꽃게, 영흥도의 바지락처럼 섬 고유의 특산물로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이 번지고 있는 인천 대표 수산물이다.

해수부, 2017년 수산업경영인 1206명 선정

인당 최대 3억원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는 어촌 고령화에 대비하고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인력육성을 위한 수산업경영인을 발굴,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에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 수산업경영인 1206명을 선정·발표하며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산업경영인 선정 현황을 보면 어업인후계자가 954명(79.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554명(46%)으로 가장 많았다.

또 연령별로는 40대가 600명(49.8%)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90명(32.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는 양식어업 종사자가 594명(49.3%), 어선어업 종사자가 555명(46%) 등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단계별로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기대출받은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귀어창업자금 등 기반조성자금을 차감한 금액까지 수산업 창업 및 기반확충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700억원 수준이던 융자사업 규모를 1200억 원으로 확대해 어선어업·양식업·수산물가공 및 유통·소금제조업 등 수산업 기반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계별 지원한도를 보면 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등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공동체 탐방 / 강원 양양 수산 자율관리공동체

철저한 자원관리로 소득증대 효과 뚜렷 ... 관광어촌으로 재도약할 터



지난해 바다식목일 행사를 가진 수산공동체 사무실 앞에서 포즈를 취한 권영환 위원장.

지난 2002년과 2003년 연이은 초대형 태풍 '루사'와 '매미'로 초토화된 강원도 양양군의 한 어촌마을이 젊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어장관리에 힘쓴 결과, 지난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재해를 극복하고 '함께 잘 살아보자'며 2004년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게 된 수산공동체는 여타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고령화와 리더의 잦은 교체로 회원간 결속력이 떨어졌으나 권영환(54) 위원장이 2009년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동체가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자원관리에 대한 회원들의 의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화합된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수산공동체 회원.

권 위원장은 회원들이 화합하려면 소득이 높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원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57ha의 마을어장을 절반씩 윤번제로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하는 한편 전복, 해삼, 문어, 참가자미 등 주요 품종에 대한 채취 및 채포 금지규정을 현행 법규보다 엄격히 적용해 시행했다.

또 공동체의 투명한 회계처리가 회원간 결속력을 다지는 선결과제라고 판단, 매월 11일은 조업과 출어를 금지하는 휴무일로 정해 전체 회원들이 결산내역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활동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휴무일에 출어할 경우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세 번째는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정해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반면 자원회복을 위한 치어방류행사 등에 참여하면 일당을 지급하는 등 공동체의 활동에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수산공동체 화합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45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수산공동체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4000만원 정



재해가 준 교훈을 잊지 않고 어장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회원들.

도로 자율관리어업 참여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마을어장의 자원증식사업으로 2010년 850만원에 불과한 가구당 마을어업 소득도 지금은 3배 가량 늘어 자율관리어업으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가 뚜렷해 전국의 많은 공동체에서 견학을 오고 있다.

"전 회원들이 합심해 자율관리어업을 실천한 결과, 소득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어로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관광어업과 병행하여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권 위원장은 현재 수산항에 들어선 마리나 시설을 활용, 요트 체험으로 특화한 어촌체험마을 조성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